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 | 3  |
| 2. 개정안 부칙 .....                 | 20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

퇴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 Ⅲ. 검토의견

#### 1.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려는 경우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현행법 시행령 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며,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④ (생략)<br><u>&lt;신설&gt;</u><br><br>⑤·⑥ (생략)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br>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                                                        | 제16조(시민참여배심위원회) ① ---                                                                                                            |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 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신 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  
-----  
-----시민참여배심위원회-----.

②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③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민참여배심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시민참여배심위원회-----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 되도록-----.

1.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 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  
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신 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 · 문화 · 언론 · 고용 · 산업  
· 복지 ·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시민참여배심위원회-----  
-----  
-----  
-----.

⑥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  
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배심위

|        |                              |
|--------|------------------------------|
| 로 정한다. |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br>-----. |
|--------|------------------------------|

## 나. 검토의견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sup>1)</sup>.
-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소관 사무<sup>2)</sup>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sup>3)</sup>」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sup>4)</sup>」에  
서는 회의록의 작성 대상에서 국민참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

- 
- 3)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4)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회의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명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상정안건명  
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 의결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아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활동에 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시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0)」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 관련 단체에서 시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할사항인 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을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대비표]

| 현 행                               | 민형배의원안                            | 김영호의원안                            |
|-----------------------------------|-----------------------------------|-----------------------------------|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④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④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④ |

|                                                                                                                         |                                                                                 |                                                                                                                                                                                                                                             |
|-------------------------------------------------------------------------------------------------------------------------|---------------------------------------------------------------------------------|---------------------------------------------------------------------------------------------------------------------------------------------------------------------------------------------------------------------------------------------|
| <p>(생략)</p> <p>&lt;신설&gt;</p>                                                                                           | <p>(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 <p>(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 <p>⑤·⑥ (생략)</p> <p>제15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단서 신설&gt;</p> |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다만,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하 “중요안건”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6조</p> |
| <p>&lt;신설&gt;</p>                                                                                                       |                                                                                 |                                                                                                                                                                                                                                             |

<신 설>

<신 설>

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 중요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다시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중요안건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배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6조 (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  
진하는 경우 국민의  
견 수렴과 관련된 자  
문을 수행한다.

제16조(시 민 참 여 배 심 위  
원 회) ① -----  
-----  
-----  
-----  
-----  
-----  
----- 시 민 참  
여 배 심 위 원 회 -----.

②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⑥ ~ ⑨ (현행 제3  
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6조(국민참여배심위원회) ① -----  
-----  
-----  
-----  
-----  
-----

----- 국민 참여  
배심위원회(이하 “배심위원회”라 한다)를

-----.

② 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논의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  
라 위원회가 배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  
항

2. 제15조제4항에 따  
라 중요안건이 부  
결되어 배심위원회  
에 재논의를 요청  
한 사항

<신 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  
촉한다. 이 경우 국  
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  
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시민참여배심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시민참여배심위원  
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시민  
참여배심위원회-----  
-----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

1. 시민참여배심위원  
회의 업무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  
는 모집절차를 통  
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  
· 고용·산업·복  
지·과학기술 등

③ 배심위원회는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  
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                                                                                 |                                                                                           |                                                                                                                                          |
|---------------------------------------------------------------------------------|-------------------------------------------------------------------------------------------|------------------------------------------------------------------------------------------------------------------------------------------|
|                                                                                 | <p><u>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u></p>   |                                                                                                                                          |
| <p>④ <u>국민참여위원회의</u>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 <p>⑤ <u>시민참여배심위원회</u>-----<br/>-----<br/>-----<br/>-----<br/>-----<br/>-----.</p>         | <p>④ <u>배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배심위원회에 회부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중요안건은 다시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u></p> |
| <p><u>&lt;신 설&gt;</u></p>                                                       | <p>⑥ <u>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p> |                                                                                                                                          |

<신 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운영, 의결 방법 및 절차 등에-----.

제16조의2(배심위원회의 위원 등) ① 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이 경우 위원은  
지역별·연령별·성  
별 및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제1  
호의 위원은 전체 위  
원 수의 5분의 3 이  
상이 되어야 한다.

1. 배심위원회의 업  
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  
서 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  
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  
· 고용·산업·복  
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및 교  
육감이 추천하는

제17조(전문위원회) ①  
· ② (생략)

사람

③ 배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는 제1

|         |  |                                                                                                                                |
|---------|--|--------------------------------------------------------------------------------------------------------------------------------|
| ③ (생 략) |  | <p>3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를 위원회 및 배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복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
| 국 가 교 육<br>위원회 | <p>① 국민의견수렴·조정 시 시민참여배심위원회 의견수렴 실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견없음)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이견없음</li> </ul> <p>② 시민참여배심위원회 위원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검토) 국가교육위원회법 상 타 위원회(전문위, 특별위 등)의 경우 위원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바, 법체계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li> </ul> <p>③ 시민참여배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수용)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li> <li>- 다만,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5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로 일반적인 회의가 아닌 워크숍,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대표성·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이</li> </ul> |
|----------------|----------------------------------------------------------------------------------------------------------------------------------------------------------------------------------------------------------------------------------------------------------------------------------------------------------------------------------------------------------------------------------------------------------------------------------------------------------------------------------------------------------------------------------------------------------------------------------------|

|    |                                                                                                                                                                                                                                                                                                                                                                                                                                                                                                                                                                                                                                                                                                                                                                                                                                                                            |
|----|----------------------------------------------------------------------------------------------------------------------------------------------------------------------------------------------------------------------------------------------------------------------------------------------------------------------------------------------------------------------------------------------------------------------------------------------------------------------------------------------------------------------------------------------------------------------------------------------------------------------------------------------------------------------------------------------------------------------------------------------------------------------------------------------------------------------------------------------------------------------------|
|    | <p>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된바, 위원 개개인의 발언보다 종합된 의견이 보다 의미 있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보다,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자구 수정 필요</li> </ul> <p>④ 시민참여배심위원회 결과 보고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견없음) 시민참여배심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 이견없음</li> </ul>                                                                                                                                                                                                                                                                                                                                                                                                                                                                                                                                                |
| 기타 | <p>① 안 제13조 관련</p> <p>[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제13조 제5항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할사항인 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을 사실상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에 배치</li> <li>- 국가교육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고 대표성이 없는 일반 시민 일부에게 과도한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책무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나 위헌성 내포</li> </ul> <p>② 안 제16조 관련</p> <p>[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배심위원회 위원을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결정권한에 비추어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시민적 대표성이 미흡하여 입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li> <li>- 제2호가 시장과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규정과 내용이 동일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 입법</li> </ul> <p>[경북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배심원단 도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 결여 우려)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li> </ul> |

|  |                                                                                                                                                                                                                                                                                                                                                                |
|--|----------------------------------------------------------------------------------------------------------------------------------------------------------------------------------------------------------------------------------------------------------------------------------------------------------------------------------------------------------------|
|  | <p>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거나,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나 감정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수렴 비효율성 및 현실적 한계) 시민들의 의견은 온라인 설문조사, 공청회,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가능</li> <li>-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우선) 국민참여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은 위원회 자체의 존재 문제보다 기존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li> </ul> |
|--|----------------------------------------------------------------------------------------------------------------------------------------------------------------------------------------------------------------------------------------------------------------------------------------------------------------------------------------------------------------|

## 2. 개정안 부칙

###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 제2조는 개정안의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조문]

| 안 부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국민참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참여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 따른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본다.<br>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

###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이전 기존에 설치된 국민참여

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보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시민참여배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려는 것으로, 이는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6 |